

법무부, 유학생 비자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민관협의회 출범

- 법무부, 민·관 합동으로 '외국인 유학생 비자정책 방향 설정' 을 위한 논의 착수
- 한국어 역량·학업 의지 검증, 인공지능(AI)시대에 맞게 비자 유형 다변화 함께 추진하여 우수인재 적극 유치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정부와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비자를 엄격하게 검증하고, 입국 후에는 대학의 책임하에 유연한 체류 관리로 이어지는 국민주권 정부의 새로운 유학생 비자정책 방향 논의에 나선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시대를 맞아 정부와 대학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유학생 비자정책 체계 전환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를 4월 20일(월) 발족했다.

민·관협의회는 법무부 이진수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전국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 한국사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한국교육개발원장, 이민정책연구원장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내·외 전문가와 함께 운영되며, 실무협의회에서 (주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장) 세부 논의를 거쳐 8월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민·관협의회는 출입국 이민정책적 관점에서 해외에서 우수 인재를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국내 교육기관을 통해 지역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범한다.

현재 외국인 유학생 수는 급격히 증가하여 32만 명을 넘어섰으나, 그간의 유학생 유치는 대학에서 내국인 학생의 빈자리를 보충하기 위한 단기적 문제 해결에 치중해온 측면이 있었다. 유학생들은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수업에서 소외되거나 졸업 후에는 국내 취업과 사회통합에도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전략적 질 관리’와 ‘졸업 후 기회 확대’ 병행

이번 민·관협의회에서 논의된 비자정책 제도 개선의 원칙은 ‘입국 전 엄격한 유학생 비자(D-2, D-4) 검증’과 ‘입국 후 유연한 관리’이다.

첫째,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입국하기 전 단계에서는 대한민국 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검증된 학생’을 선발하는 데 집중한다.

대학에서 성장 잠재력을 가진 해외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되, 그에 따른 관리 책임도 강화한다. 예를 들어 법무부는 유입 경로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대학, 재외공관과 민간 유학원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학위·학력 검증도 강화할 예정이다.

다만, 실제 학업 의지와 한국어 역량을 갖추었으면 재정능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유학비자가 거부되지 않도록 하여 우수인재가 적극 한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재유치 전략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둘째,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입국한 후에는 대학에서 유학생 관리의 자율성을 갖도록 존중하고 학생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지원한다.

유학생들이 공부를 시작해서 취업후 정착하기까지 비자가 이어질 수 있도록 ‘성장 사다리 비자 체계’를 설계하고, 인공지능(AI)시대에 맞춰 다양한 학습 형태를 포용할 수 있도록 비자 유형의 다변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대학은 유학생의 질적 수준을 관리하고, 정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우수 유학생이 졸업 후 우리나라를 떠나지 않도록 하는 선순환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오늘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 발족은 정부와 대학이 유학생을 핵심 인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공동 대응을 시작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민·관이 긴밀히 소통하여 우수한 외국인 인재들이 대한민국에서 꿈을 펼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이를 통해 민생경제가 되살아나도록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에서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법무부 체류관리과	책임자	과 장	이향숙 (02-2110-4055)
		담당자	사무관	용창식 (02-2110-4062)

□ 추진 배경

- 그동안 유학생 정책이 규모(30만명) 확충에 치중하여 유학생의 자질(Quality) 향상에는 정책 집중이나 논의가 미흡하였음
- 이민정책적 관점에서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유학생 유치·관리·활용·정착 등 단계별 정책 실행을 위한 협의회 구성 운영 필요
- ※ 법무부 「2030인민정책 미래 전략」 中 ‘신성장동력으로서의 유학생 활용’ 실행 전략 협의체

□ 협의회 구성 및 역할

- **(구성)** 만관 합동 ①**협의회 위원** + ②**협의회 실무그룹 2단계**로 구성 운영
 - (협의회) 위원 11명 (위원장 : 법무부 차관)
 - (실무그룹) 실무위원 8명 (책임 : 출입국정책단장)
- **(역할)**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개선안 마련 시행
 - (위원) 제도개선 제안, 결과물 도출에 대한 자문 및 승인
 - (실무그룹) 제도개선 과제 발굴, 개선안 마련 및 시행계획 수립

□ 협의회 운영 계획

(4월) 착수회의	▶	(4~8월) 실무그룹 회의	▶	(6월) 협의회 중간보고	▶	(8월) 최종 보고 (전체회의)	▶	(11월) 정책 채택 및 추진
논의과제 선정 및 실무그룹 구성		총5~6회 (각 과제별 2~3주 소요)		실무그룹 논의 내용 중간보고 및 과제점검		제도개선 실행과제 채택 및 활동 종료		외국인정책 위원회 안건 상정 (위원장: 국무총리)

□ 유학생 연도별 체류 현황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3월
소 계	163,699	197,234	226,507	263,775	308,838	326,385
전문학사(D-2-1)	9,595	9,774	11,337	18,319	29,319	35,308
학사(D-2-2)	58,204	66,329	72,255	84,796	105,257	117,491
석사(D-2-3)	22,585	27,587	32,208	38,336	47,623	51,381
박사(D-2-4)	13,919	18,065	22,247	22,607	22,368	21,776
연구유학(D-2-5)	226	222	225	263	315	334
교환학생(D-2-6)	4,877	9,242	10,213	10,180	10,237	12,733
일-학습연계(D-2-7)	1,413	2,003	2,464	2,659	3,037	3,009
방문학생(D-2-8)	359	840	1,145	1,359	1,415	1,624
한국어연수(D-4-1)	52,506	63,146	74,361	85,173	88,661	81,773
외국어연수(D-4-7)	15	26	52	83	606	956

□ 유학생 국적별 체류 현황('26. 3.)

구분	베트남	중국	우즈베키스탄	네팔	몽골	기타
소 계	122,734	76,284	22,477	20,324	19,284	65,282
유학(D-2)	65,819	71,719	20,850	19,581	14,730	50,957
어학연수(D-4-1, D-4-7)	56,915	4,565	1,627	743	4,554	14,325

※ 베트남은 대다수가 유학에 앞서 어학연수(D-4,2년) 후 유학(D-2) 자격으로 변경함